기 고

김 기 태 전남도의원

건설노조 불법행위 부당한 금품요구 근절돼야

건설산업은 경제성장을 대표하는 국가 기간산업이자 취업유발효과가 큰 고용산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건설 수주 및 투자 지표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미래 건설경기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건설노조의 불법·무법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노조의 도를 넘어선 막가파식 행태가 여러 매체를 통해 연일 오르내렸다. 그중 지난 4월24일 종료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대표적이다.

유독 이번 청원이 눈길을 끌었던 점은 지금까지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했던 건설노조의 적나라한 불법적이고 무법한 행위가 전 국민 앞에 고스란히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고착 관행화된 노조와의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5만 여명의 참여를 이끌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건설노조의 압박을 모면하기에만 급급했던 불편한 진실을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각시킬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청원내용의 핵심은 건설현장 내 건설노조들의 악질적인 무법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자에 따르면 현재 건설현장 내 노조는 9개나 되고,신규현장이 생기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서로 자기 소속 노조 조합원을 고용하도록 강요한다고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새벽부터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통제하며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불법검문하는 등 무법행위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해당 노조원을 채용한 이후에도 지속된다는 점이다.

비노조원에 비해 평균 작업량이 50~70% 수준이라고 하니 당연히 공사기간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은 고스란히 건설업체에 전가된다.

심지어 노조원 관리자 명목의 노조 전임비 등의 이런 저런 추가비용은 이미 관행화 된지 오래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조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노조의 무차별적인 진정이나 고소·고발은 회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노조 뜻대로 할 수 밖에 없다.

기약 없이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사업주에겐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면서도 노조에겐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수방관해 왔던 게 사실이다.

현 정부 들어 그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이렇다 보니 건설노조의 행동은 날로 대범하고 과격해져 가고 있으며 이익만을 좇는 또 다른 형태의 노조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추세다. 건설 역사 60년, 몇몇 인사들은 실로 격세지감을 느낄만한 일이다.

과거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의 처우는 그리 좋지 못했다. 노조가 활동하기 전 노동자들은 사업주의 무한 착취에서 벗어나기 힘든 사회 구조 속에 있었다.

노조가 만들어져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부당한 고용계약이 개선되면서부터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적정 임금체계가 현실화 돼 왔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더욱 거세고 빠르게 민주사회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까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선을 넘는 행태를 그저 안고 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는 노조의 이 같은 무법행위는 올바른 경제민주화 정착에 힘쓰려는 그간의 정부 노력과는 온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혼란만을 가중시키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뿐이다.

결국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게 뻔하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놔둬서는 안 될 일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나서야할 때다.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 칭할 수 없는 일부 건설노조의 악질적인 횡포와 불법·무법행위에 대해서 과거처럼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다.

작금의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나 부당한 금품요구는 이런 이유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맞다. 물론 아직도 열악한 근로환경 등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업주도 적극 나서야만 한다.

여기에 건설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점검하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상생이 절실한 시점이다. 노사 모두 기본원칙을 거스르는 행위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자.

社 說

방치 안 되는 집배원 과로

무리한 주 52시간 정책으로 오히려 수당도 받을 수 없는 '무료노동'이 늘어나는 등 집배원의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니 걱정이 앞선다.

젊은 집배원의 과로사 추정 사례가 늘어난 만큼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와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지난 주 국회 정론관에서 '우정사업본부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주 52시간 정책과 경영위기를 핑계로 꾸준하게 집배원들의 노동강도와 무료노동을 늘려왔다"고 지적하며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집배원 사망 사례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우체국 소속 집배원 박모(59)씨와 공주우체국 무기계약직 집배원 이모씨(34)는 지난 12일과 13일에 심장마비로 숨졌다.

지난 4월에도 집배원 2명이 각각 심장마비와 뇌출혈으로 숨진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사망한 집배원은 25명이었다. 최근 늘어난 집배원의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잠을 자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게 주를 이뤘는데, 이는 과로사의 전형적인 양태라는 것이다.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우정사업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집배원 노동조건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745시간이었다. 임금노동자 연평균 노동시간인 2052시간과 비교하면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으로 평 균 87일을 더 일한 것이다.

과로의 원인 중 하나가 무료노동이 확대된 것을 들수 있다. 우정본부는 집배원들의 과로사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정밀하게 진단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圖	그림	도
寫	베낄	사
禽	새	금
獸	짐승	수

圖寫禽獸

▷뜻: 궁전(宮殿) 내부(內部)에는 유명(有名)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 조각 등(等)으로 장식(裝飾)되어 있음水)가 있음.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어르신 안전운전 사전 몸풀기 건강확인 생활화 해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사고 통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무려 150%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인과적 현상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 기준 14.3%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원인은 대개 노화로 인한 신체능력 저하에서 비롯된다.

대표적으로 인지능력 저하,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인 정지시력 및 움직이는 물체를 보는 시각 능력인 동체 시력 저하가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적성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함으로써 인지능력 저하, 질병 등 운전에 위험을 끼치는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앞으로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는 갱신 전 고령자 교통사고 사례, 개정된 도로교통법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는데,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운전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통법규 마련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노력도 중요하지만,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신체능력을 맹신해 사고가 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각 가정·차량·업소 및 점포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하여 우리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센터장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222-5547
팩스 (062)222-5548
광고국 (062)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